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김 성 만*

-
- I. 서론
 - II. 북한 군사도발과 우리의 대응
 - III. 북한의 군사도발 전망
 - IV. 우리의 대응개념과 보완 과제
 - V. 결론
-

I. 서론

우리해군 천안함(초계함, 만재 1200톤)은 2010년 3월 26일 21:22분경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NLL 경비중(中)에 수중 폭발물에 의해 선체가 두 동강나 침몰했다. 승조원 104명 중에 58명은 구조되었으나 46명은 침몰 함체와 같이 수장되어 순국(전사)했다. 국제민군(民·軍)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2010.5.20)에 의하면 북한잠수정(연어급, 130톤)의 어뢰공격으로 침몰되었다. 백령도 영해 내에서 평상적인 초계활동 중에 기습을 당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천안함 침

*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현 21세기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 본 논문은 KODEF 및 KIMS 주최 세미나(2014.3.20)에서 발표한 것임. 이후 자료(북한 신형방사포 발사, 김정은의 2015년 통일大戰 준비 지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억지주장, 한미 정상 의 전략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 합의)를 보완함.

물에 대해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저녁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했다”며 “이는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대(對)국민 담화문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군사실무회담(2010.9.30, 2011.2.8~9)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남한 정부의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억지 주장까지 했다. 우리 국방장관이 약속한 대북 5·24조치(확성기·전광판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시행하지 않자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을 통해 한국군의 취약점을 확인한 북한은 이후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우리 국방수뇌부는 북한의 국지전·전면전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각종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그래서 제2장에서 천안함 폭침이후 북한은 어떤 도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한지를, 제3장에서는 북한군의 능력과 도발의지를 통해 도발가능성을 전망하고, 제4장에서 우리의 대응개념과 보완과제를 제시한다.

Ⅱ. 북한 군사도발과 우리의 대응

1. 연평도 포격

연평부대는 2010년 11월 23일 오전 10시15분부터 계획된 해상사격훈련을 시작했다. 오후 일과에 들어선 뒤 첫 포상사격을 끝냈다. 잠시의 정비시간을 가졌다. 바로 이때 북한은 포격을 가해 왔다. 14시34분~14시46분 150발, 15시12분~15시29분 20발이다. 연평부대는 K-9자주포로 14시47분~15시15분 50발, 15시25분~15시41분 30발 대응 사격했다.¹⁾

1) 해군본부, 『해군 2011년 01/02』, pp.25-27.

상급부대의 정보분석, 작전지휘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군은 2010년 1월 27일~29일에 이어 8월 9일에 서해5도 우리 수역에 포격을 했다. 군은 북한이 서해5도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2010년 UFG연습(8.16~29)에서 공격상황을 상정하여 연습했다.²⁾ 북한은 포격 당일(11.23) 오전 8시20분에 장성급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로 ‘북측 영해에 대한 포사격이 이뤄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한다’고 경고했다.³⁾ 그날 정보부대는 북한군 방사포 여섯 문이 갯도진지를 나와 개머리 해안의 포상(砲床)에 방열된 것을 확인했다.⁴⁾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4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평도 도발 당시 군(軍)에 “공군은 똘똘 뭉쳐서 공습을 지시했으나, 군 고위 관계자가 “교전규칙에 따르면 공군이 나서면 절대 안 된다. 미국과도 상의해야 한다”며 막았다고 밝혔다.⁵⁾ 군의 국군통수 보좌에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2.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3차 핵실험

북한은 2012년 4월과 12월에 장거리미사일(대포동 2호)을 발사했다. 12월 12일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는 이지스함(SM-2)으로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고 1단추진체 낙하물 일부를 수거(인양)했다. 전문가들은 미국본토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1만3천km 이상의 ICBM 개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⁶⁾ 일본과 미국은 영토(영해)에 낙하할 것에 대비하여 이지스함(SM-3), THAAD미사일, 패트리엇(PAC-3)로 요격준비를 했다. 우리는 요격능력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시점을 예측하지 못해 지탄(指彈)을 받았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11시57분에 3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2시43분께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실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2) 합동참모본부, “10 UFG 연습 특징과 성과” 『승참 제45호(2010.10월)』, p.39.

3) “김정은이 목선을 타고 무도 방어대를 찾아간 이유”, 『동아닷컴』, 2012.8.21.

4) 이정훈, 『연평도 통일론』(서울: 글마당, 2013), p.55.

5) “李 대통령, 연평도 도발 당시 北 공습 지시했지만...”, 『조선일보』, 2013.2.5.

6) 美 국방장관, “北 미사일 美 공격 능력 보유”, 『CBS노컷뉴스』, 2013.1.18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부는 핵실험의 폭발력을 6~7kt로 분석했다.

3. 사이버전 및 전자전 공격

북한은 2011년 3월 4일 청와대와 국회, 언론사 등 국내 40개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 2011년 4월 11일 농협 인터넷뱅킹 마비사건, 2011년 11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악성코드 이메일 발송, 2012년 6월 9일 중앙일보 신문제작 서버 해킹, 2013년 3월 20일 6개 방송·금융사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사이버 테러, 2013년 6월 25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5개 정부기관과 11개 언론사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가해 왔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창설(2010.1)된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군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6천392건을 탐지한 것으로 2013년 10월 22일 밝혔다. 공격유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격하거나 악성코드 및 해킹 메일을 보내는 수법 등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준장)의 인력은 400여 명 수준이다.⁷⁾

한독미디어대학원 한희 교수는 2014년 2월 13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101회 KIMS MORNING FORUM에서 ‘사이버 땅굴,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3천명의 해커가 지난 10년간 한국 내 1천여 개의 목표를 이미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장악된 표적에 대한 의도적 도발로 우리 능력의 한계를 관찰하고 있다. 최적 마비를 위한 모의지수를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2012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한 ‘GPS수신 장애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한은 3차례 GPS 전파교란 공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2010년 8월 23일~26일, 2011년 3월 4일~14일, 2012년 4월 28일~5월 13일 전파교란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10년에는 항공기 15대와 해군함정 1척, 2011년에는 항공기 106대와 선박 10척, 2012년에는 항공기 1천16대와 선박 254척이 피해를 입었다.⁸⁾ 북한은 2012년 3월에 한국 최초의 민·군 겸용

7) “사이버사령부, 창설후 北 사이버공격 6천392건 탐지”, 『연합뉴스』, 2013.10.22.

8) “중앙전파관리소, 北 GPS 전파교란 공격 3년간 3차례”, 『통일뉴스』, 2012.9.18.

통신위성인 무궁화5호에 전파교란(재밍) 공격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자는 2012년 11월 14일 “지난 3월 평양 인근에 위치한 대형안테나에서 엄청난 양의 교란전파가 무궁화5호를 향해 발사됐다”며 “당시 지상의 국군지휘통신 사령부 위성운영국의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우리 통신위성의 항(抗)재밍(전파교란을 막는 기술) 수준을 시험하기 위해 전파를 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⁹⁾

4. 전쟁위기 조성

북한은 2013년 1월~4월 전쟁위기를 조성했다. 전면대결전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완전 백지화,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대표부 활동 중지, 미-북 군부전화 차단, 서울·워싱턴 불바다 협박, 핵무기 선제타격 권리행사 선언, 제2의 조선전쟁 불가피, 남북 불가침합의 폐기,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전화 차단, 1호 전투준비태세 발동, 남북 군통신선 차단, 미사일사격 대기 지시,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영변원자로 가동 협박, 평양주재 외국외교관 철수 요구,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 한국내 외국인 철수 협박을 했다.

우리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¹⁰⁾의 하나인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위기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 억제전력(항모전투단, 핵잠수함, B-52/B-2폭격기, F-22스텔스기)을 신속히 투입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작전계획 5027’에 약속한 증원전력 일부를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억제되었다. 한미연합사의 평시 기능이 부각되었다. 2013년 2월 25일 출범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박근혜 정부는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 5월부터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의 재(再)연기를 추진하고 있다.¹¹⁾

9) “북, 무궁화 5호 겨냥 전파교란 공격”, 『중앙일보』, 2012.11.15.

10) 한미 양국 대통령이 1994년 12월 1일 한미연합사에 평시 임무로 부여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은 ①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② 작전계획 수립 ③ 연합합동교리 발전 ④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⑤ 연합 정보관리 ⑥ C4I 상호 운용성이다.(이상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서울: 연경문화사, 2004), p.223).

11) 우리 정부는 2014년 4월 25일 서울 한미정상회담(박근혜-오바마)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

Ⅲ. 북한의 군사도발 전망

1. 대량살상무기(WMD)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1년 6월 13일 국회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핵실험 이후) 기간이 오래됐으니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¹²⁾ 김태우 박사(당시 통일연구원원장)는 2012년 8월에 발간한 저서에서 ‘확실한 미사일 강대국인 북한은 이미 넘치도록 많은 핵 투발 수단을 가진 셈이다. 북한의 코앞에 위치한 우리가 북핵의 소형화와 첨단화 여부를 따지는 것은 사치스런 행동이다. 또한, 북한의 강력한 핵보유 동기와 수십 년에 걸친 핵무기 개발 노력을 종합하면 북한의 핵무기 실력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¹³⁾

지난해(2013년) 미국 국방부의 ‘2012 북한 군사안보상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최대 200대까지 보유하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단거리 미사일인 KN-02(사거리 120km)와 스커드 계열(340km, 550km) 이동식 발사대가 100대이고, 노동미사일(1,300km)과 무수단미사일(3,000km)용이 각각 50대이다. 북한이 실전 배치한 미사일은 총 1천여 기에 이른다.

국방대 문장렬 교수는 2014년 2월 7일 한국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의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 주제 발표에서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플루토늄 핵무기 2~19기, 우라늄 핵무기 0~20기, 중간값을 취할 경우 총 보유수는 대략 20기로 추정된다. 향후 2016년에는 17~52개(중간값 34), 2018년에는 27~61기(중간값 44)로 늘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폭탄 70여 기를 고려할 때, 약 100기 수준을 보유하면서, 각종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질적 성능향상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가 2013년 9월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안보고 자료에

12) 김관진 국방 “북한 핵무기 소형화 성공했을 것”, 『연합뉴스』, 2011.6.13.

13) 김태우, 『북핵을 넘어 통일로』(서울: 명인문화사, 2012), pp.48-49.

서 국방부는 북핵에 대해 “2010년까지는 개발·실험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¹⁴⁾

그러면 북한은 언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15일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과의 협상이나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30여 년 유지됐는데 북한은 벌써 60년째”라며 “(북한)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¹⁵⁾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약 2,500~5,000톤을 전국적으로 분산된 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⁶⁾ 이같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최소한 대남(對南) 전쟁억제력을 사실상 구축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

2. 재래식 군사력 증강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면전 준비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형전차(선군호, 이글라 지대공미사일 탑재) 900여 대를 2005년~2012년에 전력화하고 이 중 대부분을 황해도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천안함 폭침(爆沈)에 성공한 이후 신형 잠수함정을 연간 20척 수준으로 건조(증강)하고 있다. 연간 5척을 크게 넘는 규모다.¹⁷⁾ 백령도 북방 50km 고암포 지역에 공기부양 상륙정 기지(60여 척 수용)를 2011년 6월에 완공했다. 서해5도를 우회하여 인천-태안반도까지 기습상륙이 가능하다. 2012년 5월에 전진기지(태탄, 누천리)에 헬기 50여 대를 배치했다.

2013년 초부터 122mm 방사포를 서해5도에 근접한 장재도, 무도, 월내도에 배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DMZ인근에 배치된 구형 방사포를 신형으로 교체 중인 것으로 2013년 6월 30일 확인됐다. 북한 군사동향에 정통한 당국자는 “북한이 107mm(사거리 8~10km) 방사포를 122mm(20km)와 240mm(60~70km)

14) 軍 “북핵, ‘언제든 무기화’ 실제위협으로 발전”, 『연합뉴스』, 2013.9.3.

15) 北 “정권교체” 언급한 이 대통령에 “민족반역자 최후 발악” 맹비난, 『조선닷컴』, 2013.2.16.

16) 국방부, 『2012년 국방백서』, p.30.

17) “北, ‘천안함 폭침’ 이후 잠수정 생산 4배 늘려”, 『Daily NK』, 2013.4.4.

방사포로 교체 중”이라며 “구형 무기를 현대화하는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240mm 방사포는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 수기가 추가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그리고 북한이 300mm방사포(KN-09)를 개발하여 시험 사격을 계속하고 있다. 2013년 5월 18일~20일(6발), 6월 26일(4발), 2014년 2월 21일(4발), 3월 4일(4발), 6월 26일(3발), 7월 2일(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최대 사거리가 190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 인근지역까지 위협권이다. 방사포에 대해선 아직 우리 군에 요격수단이 없고 요격무기 도입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는 것이 정상인데 북한은 오히려 증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서해5도 공격능력, 기습상륙 및 공중강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¹⁸⁾ 정상이 아니다. 도발 준비로 볼 수 있다.

국정원은 2013년 11월 4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대남(對南) 사이버전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공격실태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寶劍)이다”라고 말했다고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국방위와 노동당 산하에 1,700여 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조직을 두고 있다. 북한은 외화벌이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확충했고, ○○센터 등에서 4,200여 명이 투입돼 활동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은 유사(有事)시 동원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조직 구성을 완료했다”고 했다. 북한은 또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취급소와 원유 저장소, 취·정수장 위치정보, 발전소의 좌표정보와 변전소 목록, 주요 도시의 지하철, 고가차도, 터널, 교량, 기차역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¹⁹⁾

18) 북한은 2009년부터 년 4회 도서점령훈련을 하고 있다. 김정은 참관 하에 2013년 3월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한 상륙훈련을 통해 원산근해와 서해 청천강 일대에서, 2014년 7월 4일에는 합동 도서 점령상륙훈련을 동해안에서 실시했다. 2014년 1월 평양 인근에서 AN-2 공수낙하훈련을 했다. 북한은 일부 훈련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19) 김정은 “사이버전은 만능의 보검”... 黨산하에 7개 해킹조직 1700명, 『조선일보』, 2013.11.4.

3. 전쟁계획 및 전시사업세칙 개정

북한군은 2010년경에 수도권 점령 후 협상으로 전쟁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고위관계자는 2010년 4월 26일 “북한군이 전면전을 상정한 기존의 ‘5-7 전쟁계획’을 ‘제한적 점령 후 협상’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미군의 발전된 재래식 첨단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1980년대 수립한 ‘5-7 전쟁계획’은 개전 초기에 장사정포 등을 퍼부은 뒤 기계화부대를 앞세워 5~7일 만에 남한전역을 장악하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새로운 계획은 개전 초기 서울과 수도권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해 점령하는 것”이라며 “일단 수도권을 점령한 뒤 상황에 따라 남쪽으로 더 진격하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점령하면 유리한 조건하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²⁰⁾

북한은 2012년 9월에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상태를 선포하는 경우로 세 가지 상황을 규정했다. 개정 전시세칙에

- ▶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
- ▶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대될 때
- ▶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토록 했다.²¹⁾

4. 북한정권의 도발 의지

김정은은 2012년 8월 연평도 북방의 무도·장재도 방어대를 방문하고 “서해5도를 벌초해 버려라”고 지시했다. 2013년 3월 6일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김정은은 작전상황실에서 핵무기 공격준비를 지시하는 현장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대담성까지 보였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11일 백령도 인근의 월내도 방어대와 제641군부대

20) “北, 대남작전 바뀌, 수도권 점령 후 협상”, 『중앙일보』, 2010.4.27

21) 北 “남에국역량 요청엔 戰時선포”, 『동아일보』, 2013.8.22.

산하 장거리포병 구분대를 잇달아 시찰하고 “불도가니에 쏘어 넣어라”고 또다시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도발의사를 드러냈다.²²⁾

대북소식통이 2013년 10월 17일 입수한 북한군 내부분견에 따르면 김정은은 군(軍)을 상대로 무력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청와대 깃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라고 발언했다. 김정은은 또 “적들과 총결사전을 벌여야 하며 통일의 대사변(大事變)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의 정확한 발언시점, 문건의 작성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2013년 2월~5월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기간에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²³⁾ 김정은이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기념일(12.24)을 맞아 제526대연합부대(남포 3군단)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3년 12월 25일 보도했다. 여기서 김정은은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싸움준비 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2014년 2월 26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사상일꾼대회에서 ‘개혁개방(改革開放) 반대, 적화통일(赤化統一) 실현’이란 두 가지 확실한 의지를 밝혔다.²⁴⁾

미국 정부는 김정은이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커트 캠벨 전(前) 미국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013년 12월 15일 CNN과 인터뷰를 하던 중 “우리(미국 정부)는 김정은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스위스 학창시절 동급생을 면담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스위스 학교의 동급생뿐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접촉하고 만났다. 그 결과 우리는 그가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과대망상증이 있고, 아주 폭력지향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가 오는 2015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2014년 3월 25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올 초 북한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2015년에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통일 대전(大戰)’을 위해 전략물자를 최대한 마련하고 언제나 전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그의 신년사와 ‘중대 제안’과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정은은 앞

22) “김정은, 백령도 타격부대 또 시찰… 고도의 對南 심리전”, 『문화일보』, 2013.3.12.

23) 김정은 “내가 청와대에 공화국 깃발 꽂겠다”, 『동아일보』, 2013.10.18.

24) 김성욱, “김정은의 赤化결의”, 『조감제 닷컴』, 2014.3.1.

서 2014년 2월 25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조선혁명의 완수와 최후 승리를 위한 적(敵)들과의 총결사전”을 언급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김정은은 2011년 말 집권 직후부터 ‘나의 통일관은 무력(武力)통일이며 직접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하겠다’는 말을 자주 해 왔다”고 전했다. 우리 안보당국은 최근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²⁵⁾

5. 한미 군 수뇌부의 판단

우리 군 수뇌부는 북한이 전면전과 국지전을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3년 12월 4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2013년 후반 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와 최윤희 합참의장 주관의 ‘작전지휘관회의’를 차례로 개최했다. 장성택 실각설이 2013년 12월 3일 보도되는 가운데 열려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 권력체제 조정과정에서 불안정성과 공포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는 대남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⁶⁾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3년 9월 15일 예비역장성 대상 국방정책설명회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이념을 부정하는 종북세력이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들 종북세력과 연계해 사이버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4세대 전쟁’을 획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10월 8일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3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며 “민주남부애국역량(남한 내 종북세력)이 들고일어나 지원을 요구하면 전쟁을 선포한다고 명기하는 내용이 담긴 전시사업세칙도 개정했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해군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수도권과 서해5도를 겨냥해 포병전력을 증강했다”며 “240mm 방사포와 122mm 방사포를 배치했다”는 보고도 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민

25) “김정은, 2015년 통일大戰 만반의 준비 지시”, 『조선닷컴』, 2014.3.26.

26) “확고한 응징태세로 적 도발 원천 차단”, 『국방일보』, 2013.12.5.

주당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²⁷⁾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이 추가 도발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뎀프시 의장은 2013년 12월 19일 펜타곤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재자들에 의한 이런 종류의 내부 행동들은 종종 (대외) 도발의 전조가 된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북한이 저지르는 행동의 불가측성이 우리 모두를 매우 우려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같은 불확실한 현실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특히 그 같은 행동을 저지른 동기에 대한 의구심을 깊게 만든다”고 말했다. 헤이글 장관은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폐쇄돼 있고 투명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외부세계와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아 불가측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려들을 키운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²⁸⁾

IV. 우리의 대응개념과 보완 과제

1. 대응개념

우리 군은 북한이 국지전을 도발할 경우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연평도 피격 직후 미국에 요청하여 한미 합참의장은 2013년 3월 22일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

주요 도발유형에는

- ▲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 ▲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도발
- ▲ 저고도 공중침투 상황
- ▲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 ▲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27) 남재준 “김정은, 3년 내 무력통일 수시로 호언”, 『중앙일보』, 2013.10.9.

28) 美합참의장 “장성택 처형, 북한 추가도발 전조”, 『연합뉴스』, 2013.12.20.

▲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함정 공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개념이다.²⁹⁾ 그러나 2015년 12월에 전작권이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될 경우 연합작전을 하지 못하므로 미군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전면전은 ‘한미연합사작전계획 5027’에 따라 수행하는 개념이다. 유사 시 한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천여 대 규모이다. 증원전력은 위기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억제방안(FDO)’과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으로 구분된다.³⁰⁾ 증원전력 규모는 미국군 현 전력의 약 50%이고 한국군 전투력의 9배(필자의 판단)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3.10.2)의 제6항에서 “양 장관은 북한 핵·WMD(대량살상 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국의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합의했다. 즉,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에 ‘맞춤형 억제전략(핵우산, 미사일 방어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적어도 북한위협이 소멸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한 전쟁수행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2. 보완 과제

(1) 군사력 증강

우리 군이 남북 재래식 군사력 비교에서 열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2013년 11월 5일 국정감사에서 미군이 없으면 북한과 1대1로 싸우면 진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어났다. 국회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1월 5일 국방부 정보본부 국감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어느 쪽이 이길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한미동맹에 기초해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29) 미국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증강하고 있다. 주한미군 증강으로 2013년 4월에 생화학전 능력을 갖춘 제23화학대대(300여명), 2013년 9월 육군 항공정찰부대(무장정찰헬기 OH-58D 30대), 2014년 1월에는 기계화대대(제1-12 제병협동대대, 800여명)가 전개되었다.

30) 『2012년 국방백서』, p.48.

남·북한이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북한에 비해 몇 배 많으냐?’는 질문에 군은 44배가 많다고 답해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북한에 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며 “처음엔 진다고 했다가 전투력을 비교했을 때 열세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그런 답변을 듣고 황당했다”며 “군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³¹⁾ 김광진 국방장관은 2013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 출석, 남북한 국방력 격차를 묻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 전력은 북한의 대개 80% 수준”이라고 답변했다.³²⁾ 우리 군의 전투력 지수는 지난 10여 년 이전보다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2004년 국방백서와 2012년 국방백서의 남북 군사력 증감(增減)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군은 현역 68.1만→63.9만 명, 군단(급) 13→12개, 사단 49→46개, 기동여단 19→14개, 전차 2,300→2,400대, 장갑차 2,400→2,700대, 야포 5,100→5,300문, 전투임무기 530→460대로 전반적으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현역 117만→119만 명, 군단(급) 19→15개, 사단 75→88개, 기동여단 69→72개, 전차 3,700→4,200대, 야포 8,700→8,600문, 다련장/방사포 4,600→4,800문, 지대지 발사대 60→100기, 전투함정 430→420척, 잠수함정 60→70척, 전투임무기 830→820대로 전력이 강화되었다.

우리 군이 장비의 질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으나 북한의 양적인 측면을 포함한 총 전투력지수에서 아직도 열세다.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불균형 해소는 시급하다. 우리가 인구와 경제력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병력과 장비를 확보하면 불균형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가) 감군 중단

우리 군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20(2006.12.1 법률)’에 따라 병력을 감축해 오고 있다. 2020년까지 현역 68.1만 명→50만, 예비군 305만 명→150만을 목표로 했다. 2009년 6월에 개정된 ‘국방개혁2020수정안’에도 감군계획은 그대로 포함되었다. 국방부가 2014년 3월 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도 감군이 포함되어 있다. 상비 병력은 현재 63.3만에서 2022

31) 국방부 “미군 없이 北과 일대일로 싸우면 진다” 발언 논란, 『조선닷컴』, 2013.11.5.

32) “전쟁하면 북한 결국 멸망”, 『국방일보』, 2013.11.8.

년까지 52.2만으로 11.1만이 줄어든다. 육군만 49.8만에서 38.7만으로 감축되고 해군(4.1만)과 공군(6.5만), 해병대(2.9만)는 병력규모에 변화가 없다. 대신 간부비율은 2013년 29.5%에서 2025년까지 42.5%로 높아진다.³³⁾

그런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한국군의 감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2013년 9월 19일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병력감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 양국이 중국의 개입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2의 휴전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5~6개의 공수사단을 보유했다면 중국에게 북한정권 붕괴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 하여금 개입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또 “한국군은 오는 2020년이 되면 병력이 크게 감축돼 (북한정권 붕괴시) 북한을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든다”며 “이 역시 중국의 개입여지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³⁴⁾ 그리고 북한이 붕괴할 경우 북한 전역에 대한 안정화작전과 WMD 확보, 국경관리 등 각종 작전 수행에 최소한 26만~4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와 다투머스대의 제니퍼 린드 교수는 최근 계간지 ‘국제안보’에 공동 게재한 ‘북한의 붕괴: 군사작전과 요구들’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런 병력 요구수준은 북한군의 큰 저항이나 공격이 없는 낙관적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이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경우 필요한 병력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이 논문은 북한 붕괴시 식량부족 사태 등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북한 내에서 치안력을 유지할 안정화작전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 난민유입이 예상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한국과의 국경지대에 대한 국경통제

▲ WMD 제거 및 안전한 확보

▲ 재래식무기 무장해제

▲ 북한군 저항세력에 대한 억지 및 궤멸 작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 안정화작전에 18만~31만2천명

33) 병사는 44.6만에서 30만으로, 장교는 7.1만에서 7만으로 줄어들지만 부사관은 11.6만에서 15.2만으로 는다.

34) “北 붕괴하면 中 개입 요청... 제2 휴전선도 필요”, 『CBS 노컷』, 2013.9.24.

- ▲ 국경통제에 2만4천명
- ▲ WMD 제거에 3천~1만 명
- ▲ 재래식무기 무장해제에 4만9천명
- ▲ 저항세력 억지 및 궤멸 작전에 7천~1만500명의 병력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³⁵⁾

우리 군의 일방적인 감군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감군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적정 국방비 확보

국방부는 필요한 국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3년 7월 25일 향후 5년간 214조5천억 원의 국방예산 소요가 담긴 ‘2014~2018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해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예산안은 향후 5년간 국방비는 연평균 7.2% 증가해야 한다. 이는 2012년 ‘2013~2017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힌 연평균 증가율(6.0%)보다 1.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무기구입에 쓰는 방위력개선비는 70조2천억 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방위력개선비가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9.5%에서 2018년 34.6%까지 확대된 것이 이번 중기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2014년 국방예산은 전년도 대비 4.0% 증가하고 방위력개선비는 3.9% 증가에 그쳤다. 국회는 2014년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예산은 정부안(35조8,001억 원) 대비 944억 원 줄어든 35조7,05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에서 940억 원을 늘리고, 방위력개선비(무기획득, 연구개발)에서 1,884억 원을 줄여 그같이 의결했다. 2013년 국방예산(34조3,453억 원)에 비해서는 4.0% 증가한 규모다. 세계경제 위기 영향으로 2010년 국방예산이 전년도보다 2.0% 늘어나는데 그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국방예산에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0%(9,670억 원) 증가한 25조 1,960억 원(국방비의 70.6%)이고, 방위력개선비는 3.9%(3,934억 원) 증가한 10조5,097억 원(29.4%)이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적정 국방비 확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

35) “北붕괴시 26만~40만 병력 필요<美연구진>”, 『연합뉴스』, 2011.11.2.

고 있다. 새누리당(여당) 소속 유승민 국회국방위원장이 2013년 10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과 박근혜 정부의 2014년도 국방예산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평군 국방예산 증가율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선 8.8%, 이명박 정부 5.3%였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4.2%만 증가했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노무현 정부보다 적게) 증가시키는 건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보수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³⁶⁾

김태우 박사는 2012년에 발간한 저서에서 “한국의 국방비는 노무현 정부 이래 줄 곳 GDP대비 2%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쟁위험이 없는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의 비율과 비슷한 것이다. GDP대비 3.5%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⁷⁾ 안보실상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방위세 신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 비대칭전력(WMD, 사이버전력, 특수전전력, 서해5도 공격전력, 수중전력, 기습상륙전력 등)에 대한 대응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 미사일방어망 조기 구축

국방부는 북한 WMD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계획을 수립했다고 2013년 7월 25일 밝혔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타격개념인 킬-체인(Kill Chain, 북한 전역의 탄도미사일을 30분 내 탐지해 파괴할 수 있는 체제)을 2016년까지 구축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킬-체인을 뚫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는 2022년까지 완비한다는 목표다. 표적탐지용 정찰위성과 Global Hawk급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지상·해상·공중에서 운용하는 각종 미사일 등이 필요하다. 군은 탄도미사일 ‘현무-Ⅱ(300km)’와 순항미사일 ‘현무-Ⅲ(500, 1000, 1500km)’을 실전배치한 데 이어 800km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2,500kg가량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무인공격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스커드/노동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가 KAMD이다. 주로 사거리가 짧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 조기경보레이더(Green Pine)와 이지스함 레이더, 패트리엇(PAC-2)요격미사일, 탄도

36) “유승민, 박근혜의 ‘DMZ 평화공원’ 비판”, 『조선일보』, 2013.10.12.

37) 김태우, 전제서, pp.256-257.

탄약전통제소(AMD-CELL), 중거리(M-SAM)와 장거리(L-SAM) 지대공유도 무기 등으로 구성된다. Green Pine 레이더와 AMD-CELL은 각각 2개 지역에 배치, 구축됐다. 패트리엇(PAC-3) 수백 발은 2016년에 도입된다. 2016년께 SM-6미사일을 도입해 이지스함에 장착할 계획이다. SM-2블록4의 개량형인 SM-6은 사거리가 320~400km에 달해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초기에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M-SAM과 L-SAM은 각각 2020년, 2022년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³⁸⁾

그러나 KAMD 확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그리고 최봉완 한남대 교수(국방무기체계·M&S 연구센터장)는 2014년 1월 15일 ‘북 핵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이 1톤의 핵무기를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1천km 거리에서 발사하면 11분15초(675초)만에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 PAC-3로는 고도 12~15km에서 단 1초가량만 요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토론회를 마친 유승민 국회국방위원장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그려야 한다. THAAD와 SM-3미사일을 전력화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역은 북한 핵미사일에 의해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³⁹⁾ 따라서 우선 미국의 육상배치용 THAAD와 탐지용 레이더(X-ban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⁴⁰⁾ 미국 이지스함(SM-3)의 한반도 전개 요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¹⁾

(라) 군 상부지휘구조 적합성 검토

우리 군은 1990년 10월 1일부터 현 합동군제(合同軍制)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장관은 각군 총장을 통해 군정(軍政)을,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軍令)을 행사한다. 군정과 군령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20여 년간 운용해 본 결과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다.

38) “박대통령 언급 ‘킬체인-KAMD’, 전작권 핵심조건”, 『연합뉴스』, 2013.10.1

39) “北핵미사일, 무수단리→서울 11분15초면 도달”, 『연합뉴스』, 2014.1.15.

40)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2014년 6월 3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 조찬강연에서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4년 6월 18일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이 사드를 구입해 배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미국예산으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41) 일본은 지난 10년간의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 노력으로 SM-3 탑재 이지스함 4척, 패트리엇(PAC-3) 17개 포대, 탐지레이더 4대, 추적레이더 7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THAAD와 탐지용 레이더(X-band)를 일본에 배치하여 보완하고 있다. 우리 이지스함(SM-2)과 패트리엇((PAC-2)은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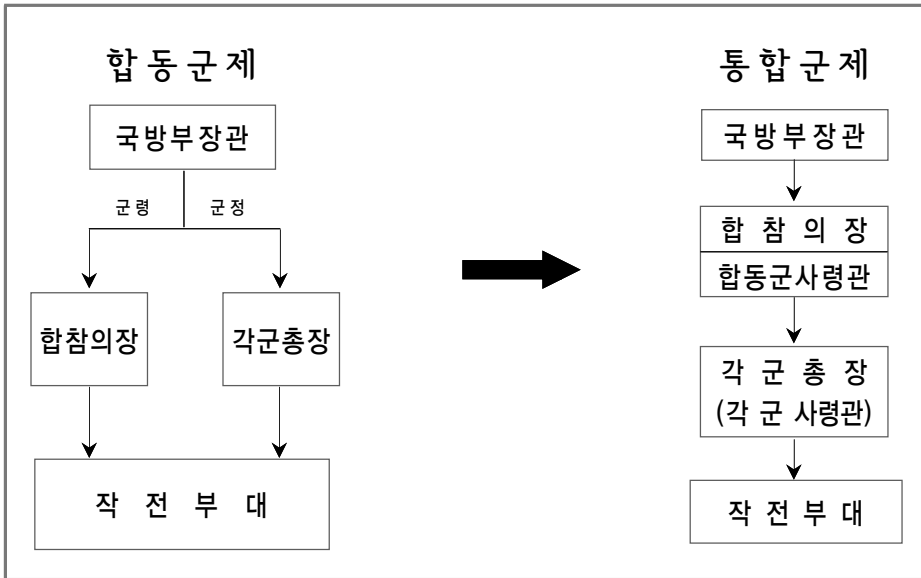
우리가 대북군사력 균형 유지에 실패하고 있다. 북한 무력도발이 1996년 상어급잠수함 강릉해안 침투이후 계속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추진된 국가정책 중에는 국방력 약화로 연결된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것만 열거하면 1998년 북한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사일방어망 미(未)구축, 북한군사력(핵무기, 탄도탄 개발) 증강에 전용 가능한 대북지원(현금, 물자)에 무관심, 2003년 병(兵)복무기간 2개월 단축, 2004년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개념 삭제, 국방개혁2020(2006.12 입법)으로 현역/예비군 감군 추진, 2007년 병복무기간 6개월 추가단축 조치,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 및 한국항구에 입항 허가, 2007년에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해체일자 2012.4.17)합의와 육군특전사령부 경기도 이천지역으로 이전 추진⁴²⁾ 등이다.

합동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합참의장의 업무 과다로 ‘정보분석’과 ‘작전지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참의장은 14개 사령부(육군1군사, 육군3군사, 육군2작전사, 해작사, 공작사, 해병대사(서북도서방위사령부), 수방사, 특전사, 항작사, 유도탄사, 국군지휘통신사, 국군화생방방호사, 국군수송사, 국군심리전단)와 해외 파병부대(5개 부대)를 작전지휘하고 있다. 적정 지휘의 폭(3~7개)을 초과한다. 추가하여 연합작전, 합동작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면서 통합방위본부장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 NSC 및 국방장관에 대해 자문해야 한다. 각군 본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정보/작전 요원으로 정보분석, 작전지휘, NSC보좌, 국회와 언론 대응에 동시 대처할 수가 없다.⁴³⁾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천안함·연평도 피격이후 통합군제(統合軍制)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2012년 제19대 개원 직후에 국방개혁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의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3년 6월 14일 국회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정권과 군령권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통합군제)에 대해서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시행과정에서 군 내부의 갈등 때문에 더는 추진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합동군사령부와 연합전구사령부(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미군)를 창설하는 계획은 아직도 살아있다. 합동군사령관이 연합전구사령관을 겸임한다.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하고 전력

42) 국방부는 국방일보(2009.4.15)에 ‘국방부, “특전사, 서울에 있어야”란 기사를 게재하고도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43) 김성만, 『국민만 모르는 안보실상』(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2013), pp.232-237.



〈그림 1〉 합동군제와 통합군제(합동군사령부 창설)

중장 등 비작전 분야를 책임지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⁴⁴⁾ 통합군제 형태다. 국방부는 이를 2014년 3월 6일에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의 지휘구조 개편에 포함했다. 미래 한반도 작전환경에 대비하고 합동성(合同性) 강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참개편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합참1차장이 군령보좌를 맡아 군사력 건설, 군구조 발전, 합동실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합참2차장은 작전지휘 보좌를 맡으면서 인사·정보·작전·군수·전략·지휘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합참 내에 미래사령부를 편성해 전작권 전환 시 연합지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미래사령부는 전작권 전환이나 미래 지휘구조에 대한 한·미 간 협의결과에 따라 적용될 시스템”이라며 “미래 적 위협 및 작전환경에 부합한 최적의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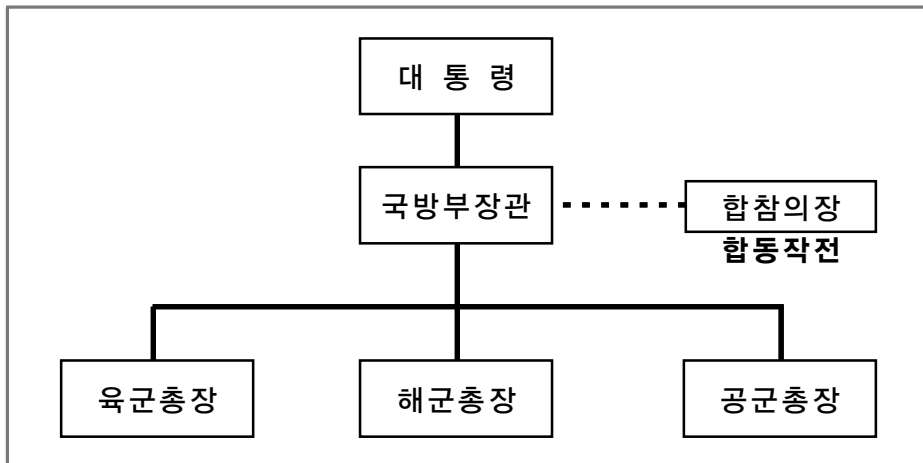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2012.4.17 전환목표)과 연계하여 2009년 4월~2010년 12월까지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시험 적용했었다. 합참은 2009년 4월 1일자로 기존 ‘작전본부’를 ‘합동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개편된 합참은 3본부,

44) “軍,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군사령부 창설 검토”, 『연합뉴스』, 2013.6.2.

45) “軍, 비대칭위협·국지도발·전면전 동시 대비(국방개혁기본계획 2014~2030 - 군구조 분야)”, 『국방일보』, 2014.3.7.

13부, 10실·처, 94과로 구성됐다. 대장 직위의 합참의장과 차장, 그 아래에 중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전력발전본부 등 3개 본부 체제로 편제됐다. 또 비서실과 전투준비태세 검열실, 공보실, 법무실 등 기존 조직은 그대로 유지했다. 합참의장의 전구작전지휘를 위한 합동작전본부는 기존의 작전본부가 확대된 성격으로 인사, 군수, 작전과 정보, 작전기획, 지휘통제, 공병 등 7개의 전투참모단을 일반참모부로 편성하고 있다.⁴⁶⁾ 합동작전본부가 장차 합동군사령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합동군사령부의 전신인 합동작전본부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험운용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후 북한의 임진강 수공(水攻)작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자 시험 적용을 2010년 12월 31일자로 중단했다.⁴⁷⁾

그러나 우리 군이 1990년까지 운용한 ‘3군본부 병렬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당시 군은 합동성(Jointness) 발휘가 잘 되었다. 군의 전투력이 높아 북한의 무력도발을 거의 억제했다. 베트남전에 전투부대를 대규모로 파병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을 지원했다. 그래서 ‘3본본부 병렬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연평도 피격에서 제기된 합동성 문제는 과거와 같이 합참의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 합동참모회의와 합참조직을 통해서다.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참모로서 합동작전·통합방위작전·연합작전 분야



46) “합참, 전작권 전환대비 1단계 조직개편 마쳐, 작전본부를 ‘합동작전본부’로 확대”, 『국방일보』, 2009.4.1.

47) 김성만, 『천안함과 연평도』(서울: 상지피앤아이, 2011), pp.316-325.

〈그림 2〉 3군본부 병렬제

를 보좌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헌법에 명시된 바대로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받아 국군을 지휘하는 체제가 된다. 장관의 업무가 가중하다면 군령 보좌를 담당하는 차관을 한 명 더 두면 될 것이다. 전쟁수행을 위해 국방부, 합참과 각군 본부가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각군 총장과 정보·작전 분야만 이전하면 될 것이다. 2012년에 완공한 합동군사령부용 건물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2) 대북 군사과제

(가)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처벌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폭침 대(對)국민 담화문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북한은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다”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2010년 11월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2010.11.23)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입니다. 더구나 1,400여 명의 주민이 평화롭게 사는 섬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포격하였습니다.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든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0년 9월 30일 남북 군사실무회담(대령급)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남측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2011년 2월 8일~9일 간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도 북한의 비협조로 결렬되었다. 북한은 이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며, 미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 했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북한이 천안함 4주기인 2014년 3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비망록’에서 천안함 사건은 “극도의 동족 대결광들이 고안해낸 민족사상 초유의 특대형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 당국이 아직까지 천안호 사건의 ‘북 소행’ 설을 계속 떠들어댔 심산이라면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사건의 진상부터 명백히 조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시는 천안호 사건의 ‘북 소행’ 설을 떠들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 약속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⁴⁸⁾ 이같이 북한은 아직까지 도발 인정,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너무 늦었다. 이제 대통령의 대북 요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방장관이 2010년 5월 24일에 약속한 대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조치에는 북한잠수정 격침⁴⁹⁾, 대북(對北)심리전 재개(전광판·확성기), 도발책임자(김정일, 김정은,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해군사령관, 정찰총국장, 4군단장 등)를 한국법정에서 처벌해야 한다. 궤석재판으로 하면 된다. 특히 대북심리전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정조준해야 한다. 그래야 굴복을 받아낼 수 있다. 만약 이런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낼 경우 대한민국과 국군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은 어뢰 공격으로 자국 군함이 격침되어도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로 간주(看做)될 것이다. 이런 평가는 독도와 이어도 방어 등에 나쁜 선례(先例)가 된다.

(나)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정리

우선적으로 폐기해야 할 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1992.2.19), 6·15남북공동선언(2000.6.15), 2007남북정상선언(2007.10.4),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2007.11.29) 등이다.

48) 北 “천안함 사건, 남북관계 장애물로 남겨둬선 안 돼”, 『연합뉴스』, 2014.3.26.

49)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을 때 북한을 때리겠다는 생각도 했다”라는 질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정박 중인 북한잠수함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있는데도 참은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2013년 2월 15일 전했다.(이 대통령 “북한 잠수함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조선닷컴, 2013.2.15).

그 이유는 이렇다.

- 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009년 1월 17일 성명을 통해 “조국이 통일 되는 그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 ② 북한 조평통은 2009년 1월 30일 성명을 통해 “첫째,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 둘째,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 ③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009년 5월 27일 성명을 통해 “3. 당면하여 조선서해 남측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 해군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 ④ 북한의 천안함 폭침은 남북 간 불가침선언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이 기습당한 곳은 백령도 서남방 2.5km(NLL남방 13.4km)로 영해이다. 평시에 타국 함정을 어뢰로 기습한 것은 전사에도 유례가 없는 잔악한 전쟁도발 행위다. 유엔헌장, 정전협정과 남북합의서를 모두 위반했다.
- ⑤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은 서해5도 법적지위를 부정한 것이다. 남북 간 불가침선언, 국제법, 정전협정과 남북합의서를 모두 위반했다. 민간인 지역을 무차별 포격한 것은 전쟁법 위반이다.
- ⑥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 개정한 북한헌법 서문에 죽은 김정일의 업적을 열거하면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核)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轉變)시켰다”고 적시했다. 북한은 2009년 9월 3일 우라늄 농축 성공을 발표했다.
- ⑦ 북한은 조평통 성명(2013.3.8)을 통해 “첫째,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한다. 둘째,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완전 백지화한다”라고 선언했다.

(다) 대북지원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북한 도발과의 연관성 연구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정부가 대북지원,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할 경우 도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면 이렇다.

사례1: 2차 정상회담 추진과 북한 제2연평해전 도발(2002)

우리 대통령 특사(통일부장관)가 2002년 4월 3일~6일 평양을 방문했다.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 개최, 개성공단 건설, 남북철도·도로 연결 등’을 김정일에게 요구했다. 김정일이 대부분 우리의 요구에 합의했다.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에 대해서만 서로 이견이 있을 정도로 진척되었다. 김정일이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김정일의 서울답방을 고수하다가 2002년 4월 22일에 “조기에 정상회담을 갖자는 데 동의하며, 개최시기는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 사이가 좋겠으며, 장소는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그렇게 경색된 것은 없었다. 2002년 4월 말 금강산에서 제4차 이산가족(849명) 상봉이 실현되었고 대북 비료지원(20만 톤)도 5월 말까지 제공됐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 제주도 도민 250여 명의 방북(5.10~15), 한민족복지재단 대표단 방북, 6·15 공동선언 2주년기념 남북공동행사(금강산) 등의 민간교류와 북측에서도 경수로 안전통제요원 25명의 방한교육(7.2~28)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다.⁵⁰⁾ 북한은 2002년 6월 29일 우리해군 참수리357정을 기습 공격하여 격침했다.

사례2: 3차 정상회담 추진과 북한 대청해전 도발 및 천안함 폭침(2009/2010)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월 15일 8·15 경축사에서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 간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약 1주일 뒤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차 서울에 온 북한조문단(김기남 비서 등)은 청와대를 방문하고 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2009년 10월 임태희 당시 노동부장관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싱가포르 비밀 접촉은 이런 분위기 속에 성사됐다. 이때도 북은 식량·비료 지원을 당연한 일처럼 요구했고 이것을 들어주려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했다. 2009년 11월 7일과 14일 개성 모 여관에서 열린 남북 당

50) 임동원, 『피스 메이커』(서울: 중앙북스, 2008), pp.592-635.

국 간 후속 비밀회담은 최종 결렬됐다. 소식통은 “당시 북측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차관급)은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까지 내밀었는데 정상회담 대가로 수십 만 톤의 쌀과 비료를 내놓으라는 내용이라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만약 북의 식량·비료 지원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정상회담까지 가는 단계마다 ‘현금’ 같은 뒷돈 요구도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을 도발했다. 북한은 2010년 1월초 ‘보복 성전(聖戰)’을 거론하며 1월 27일~29일 서해5도 우리 수역에 대량의 해안포·방사포를 사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월 28일 영국 방문 중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언급했다.⁵¹⁾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했다.

사례3: 3차 정상회담 추진과 북한 연평도 포격(2010)

북한은 2010년 7월 우리 정부에 정상회담 추진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⁵²⁾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9월 10일 러시아 방문 중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후계구도와 김정은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게 될 때 옆에 같이 있으면”이라고 언급했다. G20서울정상회의(2010.11.11~12)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17차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성사(2010.10.30~11.5, 금강산)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1월 14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대해 “한반도 평화가 전제이며, 다음이 경제협력이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통일문제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취임 이래 일관되게 언급해 왔다. 그러나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회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⁵³⁾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다.

이같이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의 전후(前後)에 대남도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대북지원과 남북교역을 활발히 했던 1998년부터

51) “올해 김정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조선일보』, 2010.1.30.

52) “北, 지난달 정상회담 또 타진”, 『동아일보』, 2010.8.18.

53) “이 대통령 국내정치 목적 남북정상회담 안해”, 『연합뉴스』, 2010.11.14.

2010년까지 북한은 도발을 강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북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⁵⁴⁾

(3) 한미군사동맹 강화

(가) 전작권 전환 계획 폐기 검토

2015년 12월 1일자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전환된다(이하 전작권 전환으로 표기). 서울 한미정상회담(2014. 4. 25)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재검토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국방장관은 2014년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담 후 “양국 장관은 2014년 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했던 것과 관련, 2014년 10월 SCM까지 양국 국방부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워크 플랜(업무 계획)’이라고 불리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일정에 공식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12월에서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⁵⁵⁾ 우리 국방부는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2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재(再)연기를 하면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시작된 것이다. 전쟁의 원칙(군사작전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에 맞지 않다.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참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국방자주권 차원에서 추진했다. 그런데 전작권은 국방 자주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방자주권(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국가 고유의 권능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환할 수 없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국방장관의 지휘권→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엄연히 다르다.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은 양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시달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를 수명하여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

54) 김성만, 『희망의 빛』(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2014), pp.295-300.

55) 한미, 전작권 전환시점 10월 결정...국방장관회담, 『연합뉴스』, 2014.5.31.

을 실행한다.

만약 전작권이 전환되면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 등을 우려해야 할 것이다.⁵⁶⁾ 특히 전쟁 시 승리할 수 없는 이유는? 2개국 이상의 군대가 동일 목표를 위해 연합작전을 해야 할 경우 연합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전쟁의 원칙(지휘통일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전쟁에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6·25전쟁 시 한국군과 유엔참전국은 다국적 연합사인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싸웠다. 북한군과 중국군은 지휘통일을 위해 1950년 12월 4일 중·조연합군사령부를 창설했다.⁵⁷⁾ 2차 대전 시 연합국(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다국적 연합사를 창설하여 승리했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에서 나토(NATO) 국가는 연합사(ISAF 등)를 창설하여 승리했다. 12가지 전쟁의 원칙을 제시하기도 한 미국의 저명한 군사이론가인 콜린즈(John M. Collins)는, 베트남전에서는 지휘통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⁵⁸⁾

따라서 외국군(미국 등)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연합사는 필수적인 기구다. 평시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한미연합사를 존속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양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사에 평시임무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부여했다. 그래서 현 한미연합사의 임무는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의 주역이었던 류병현 장군(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의장, 주미대사)은 2007년에 발간한 저서에서 “세월이 흘러 유엔사의 구성군이 한미 양개국 군으로 축소되고 미군만으로 편성된 유엔사의 단일작전 통제체제를 1978년 11월에 한미연합사를 창설하여 두 나라 대통령이 공동으로 작전통제하도록 개편되었다. 그 이후에 1994년 12월에 연합사의 평시작전통제

56) 김성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월간군사세계 2013년 9월호, 21세기군사연구소), pp.27-33. 그리고 인터넷(naver, google, daum 등)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검색 가능.

57) 洪學智(한국전쟁 시 중공군 부사령관)·홍인표 역, 『인해전술의 전쟁기록: 중국이 본 한국전쟁』(서울: 고려원, 1992), p.156. 남정옥, “공산군의 중조연합사 창설과 작전지휘”(다시 보는 6.25), 국방일보, 2008.1.28.

58) John M. Collins, *Military Strategy: Principles, Practices, And Historical Perspectives*, p.84.

체제는 전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돌아왔으니, 우리 국군은 전적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의 보좌를 받아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된 것이다. 단, 전시에 한해 동원 및 증원되는 한미 양군(兩軍)을 작전통제하면서 한미 양국 대통령의 명을 받아 우리나라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한미연합사이다. 그 편성과 조직 및 운용의 원칙은 유럽에서의 나토(NATO)사령부와 동일하다. 나토의 가맹국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이 해로워서 작전통제권을 자국으로의 환원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군사용어의 정의를 남용하다가 결국 국가이익을 해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⁵⁹⁾

우리 국민 1,007만 명이 2006년 9월 29일~2010년 5월 27일간 서명을 통해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요구했다.⁶⁰⁾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키되,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우리 군 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2012년 6월 13일 알려졌다.⁶¹⁾ 로널드 그리피스 전 미국 육군참모차장은 2013년 11월 17일 “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육군대장 출신으로 한국에서 두 차례 근무한 적이 있는 그리피스 전 차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소위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⁶²⁾ 우리 국방부가 그동안 대안으로 검토했던 ‘연합군사협조단(AMCC)’, ‘한미연합 전투참모단’, ‘미니 연합사’와 ‘연합전구사령부’는 현 한미연합사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⁶³⁾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연합사 해체의 위험성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는 전작권 전환 계획의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에 따라 얼마든지 폐기를 합의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05년경부터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요구를 반대해 왔다. 그리고 정부는 전작권 전환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환진도가 70%(2013년 4월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더 이상 진행되면 현 한미연합사의 기능 발휘

59) 류병현,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서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복지대학, 2007), pp.177-178.

60) 북핵 폐기·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 명 서명 추진본부, 『한·미 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백서』(서울: 향군 교육문화사업본부, 2010), p.9.

61) “美 ‘한미연합사 해체(2015년 12월 예정) 백지화’ 제안”, 『조선일보』, 2012.6.14.

62) 미국 前육참차장 “전작권전환, 주한미군 철수 첫수순”, 『연합뉴스』, 2013.11.18.

63) 김희상, “‘미니 연합사’로는 불안하다”, 문화일보, 2012.11.15. 및 김희상, “‘미니 연합사’로는 미래가 없다”, (konas.net), 2012.11.18.

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⁶⁴⁾

(나) 한미연합사단 창설 검토

주한 미2사단은 2016년 말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취임 후 처음 가진 2013년 11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한미연합사단 창설문제와 한강 이북 미군전력 잔류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 방안은 2012년 초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이 존슨 미8군사령관에게 의사를 타진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측은 여단급 부대의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측은 대대급 정도만 잔류해도 무방할 것이란 입장을 보여 양측의 협의가 중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의정부와 동두천 주민들은 잔류에 반발하면서 “미군 잔류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사전에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⁵⁾

이번에 미군사령관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그간 전·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쟁억제력을 지원해왔는데 이것을 한국의 요구에 따라 2004년 8월~2008년 9월 한국군에 모두 인계했다.⁶⁶⁾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2사단이 평택으로 내려가면 철수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2사단을 지원하는 주한 미7공군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지금 국방비와 병력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있다. 유사시 미국은 주일미군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스카파로티 사령관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기지에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군 주둔지로 이전하는 방안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1971년~1992년 연합부대(한미1군단, 한미야전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64)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당시 한미연합사는 도발 억제에 실패했고, 직후 연합작전도 하지 못했다. 당시 전작권 전환 작업이 65%이상 진행된 상태였다.

65) 김귀근, “북한 불안정사태-전작권 전환 연기 등 안보과제 수두룩”, 『월간군사저널 VOL.95(2014.2)』, p.83.

66) 후방지역 제독작전 임무(2004.8),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와 지원임무(2004.10), 공대지 사격장 관리(2005.8), 신속 지뢰 설치임무(2005.8), 대(對)화력전 수행본부 지휘와 통제임무(2005.10), 주보급로 통제(2005.10), 해상 대(對)특작부대 작전임무(2006.1), 근접항공지원 통제(2006.8), 기상예보 임무(2006.12)와 주·야간 탐색구조 임무(2008.9)이다.

V. 결 론

북한은 우리 정부의 5·24조치 이후에도 연평도 포격, 사이버 테러, 전면전 위기조성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언제든지 국지전과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군에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래식전력 전투력 지수는 북한 대비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장 큰 위협은 비대칭전력으로 북한의 WMD, 사이버전력, 특수전전력, 서해5도 공격전력, 수중전력, 기습상륙전력 등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우리 정부의 대응개념은 국지전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 계획’으로 대응하고, 전면전은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과 ‘맞춤형 확장억제전력’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보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보완 과제는 ①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 감군(減軍) 중단, 적정 국방비 확보, 미사일방어망 구축, 군(軍) 상부지휘구조 적합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② 대북 군사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처벌,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정리, 대북지원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북한도발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교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③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 폐기와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2004년 국방백서』, 『2012년 국방백서』
- 김성만, 『국민만 모르는 안보실상』(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2013)
- 김성만, 『천안함과 연평도』(서울: 상지피앤아이, 2011)
- 김성만, 『희망의 빛』(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2014)
- 김태우, 『북핵을 넘어 통일로』(서울: 명인문화사, 2012)
- 류병현,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서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복지대학, 2007)
- 북핵 폐기·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 명 서명 추진본부, 『한·미 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백서』(서울: 향군 교육문화사업본부, 2010)
- 이상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서울: 연경문화사, 2004)
- 이정훈, 『연평도 통일론』(서울: 글마당, 2013)
- 임동원, 『피스 메이커』(서울: 중앙북스, 2008)
- 洪學智(한국전쟁 시 중공군 부사령관)·홍인표 역, 『인해전술의 전쟁기록: 중국이 본 한국전쟁』(서울: 고려원, 1992)

2. 간행물

- 김귀근, “북한 불안정사태-전작권 전환 연기 등 안보과제 수두룩”, 『월간군사저널 VOL.95(2014.2)』
- 김성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월간군사세계 2013년 9월호』, 21세기군사연구소
- 합동참모본부, “10 UFG 연습 특징과 성과” 『삼삼 제45호(2010.10월)』
- 해군본부, 『해군 2011년 01/02』

Abstract

Trends and Prospects of N. Korea Military Provocations After the Sinking of ROKS Cheon-an

Kim Sung-Man *

Even after S. Korea took 5.24 Measure(24 May 2014), N. Korea has not stopped raising provocations such as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electronic and cyber attacks. To make matters worse, the communist country launched long-range missiles(twice) and conducted 3rd nuclear test, escalating tensions which could possibly lead to an all-out war. Korean Government failed to respond properly. However, escalation into an all-out war was deterred by the CFC immediately carrying out its peacetime duty(CODA). The US made a rapid dispatch of its augmentation forces(Aircraft carrier, nuclear-powered submarine, strategic bomber, F-22) to the Korean Peninsula.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since May 2013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been pushing ahead with re-postponement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which initially meant the disassembling of the CFC as of 1 December 2015)

More recently, there has been a series of unusual indicators from the North. Judging from its inventory of 20 nuclear weapons, 1,000 ballistic missiles and biochemical weapons, it is safe to say that N. Korea has gained at least war deterrence against S. Korea. Normally a nation with nuclear weapons shrink its size of conventional forces, but the North is pursuing the opposite, rather

* Retired Vice Admiral, COMROKFLT, Senior Research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ilitary Affairs, Seoul, Republic of Korea.

increasing them. In addition, there was a change of war plan by N. Korea in 2010, changing 'Conquering the Korean Peninsula' to 'Negotiation after the seizure of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GSMA)' and establishing detailed plans for wartime projects. The change reflects the chain reaction in which requests from pro-north groups within the South will lead to the proclamation of war. Kim, Jeong-Un, leader of N. Korean regime, sent threatening messages using words such as 'exercising a nuclear preemptive strike right' and 'burning of Seoul'. Nam, Jae-Jun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tated that Kim, Jung-Un is throwing big talks, saying communizat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ill come within the time frame of 3 years. Kim, Gwan-Jin, Defense Minister, shared an alarming message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North will raise local provocations or a full-fledged war whenever while putting much emphasis on defense posture.

As for the response concept of the Korean Government, it has been decided that 'ROK · US Combined Local Provocation Counter-Measure' will be adopted to act against local provocations from the North. Major provocation types include ▲ violation of the Northern Limit Line(NLL) with mobilization of military ships ▲ artillery provocations on Northwestern Islands ▲ low altitude airborne intrusion ▲ rear infiltration of SOF ▲ local conflicts withi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 attacking friendly ships by submarines. Counter-measures currently established by the US involves the support from USFK and USFJ. In order to keep the sworn promise, the US is reinforcing both USFK and USFJ.

An all-out war situation will be met by 'CFC OPLAN5027' and 'Tailored Expansion Deterrence Forces' with the CFC playing a central role. The US augmentation forces stands at 690,000 troops, some 160 ships, 2,000 aircraft and this comprise 50% of US total forces, which is estimated to be ninefold of Korean forces. The CFC needs to be in center in handling both local provocations and an all-out war situation.

However, the combat power of S. Korean conventional forces is approximately around 80% of that of N. Korea, which has been confirmed from comments made by Kim, Gwan-Jin, Defense Minister, during an

interpellation se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is means that S. Korean forces are not much growing. In particular, asymmetric capabilities of the North is posing a serious threat to the South including WMD, cyber warfare forces, SOF, forces targeting 5 Northwestern Islands, sub-surface and amphibious assault forces. The presence of such threats urgently requires immediate complementary efforts.

For complementary effort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① reinforcement of Korean forces; putting a stoppage to shrinking military, acquisition of adequate defense budget, building a missile defense and military leadership structure validity review, ② implementation of military tasks against the North; disciplinary measures on the sinking of ROKS Cheon-an/shelling of Yeonpyeong Islands, arrangement of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s, drawing lessons from studi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aid for N. Korea, execution of inter-Korean Summit and provocations from the North, and ③ bolstering the ROK · US alliance; disregard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plan(disassembling of CFC) and creation of a combined division.

Key words: Northeast Asia Security, WMD threat, North Korea's Brinkmanship, ROK-US Security Alliance, The Korean Peninsula's Security.